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화세대의 과제

최장집 (코리아연구원 상임고문/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인사말
 2. 386은 누구인가?
 3.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와 있나?
 4. 386의 체제내로의 흡수
 5. 386은 무엇을 할 것인가?
 6. 결론
-

1. 인사말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이하 코리아연구원)이 오늘(4월 21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주로 요즘말로 386세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책연구원입니다. 이는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으로서, 여러 면에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정책연구원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주화세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386은 누구인가?

1) 먼저 오늘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지도 20년이 가까워 옵니다. 386,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세대인 이들이 지금은 성장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새로운 역할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2) 386세대라는 정치언어

국내외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균열보다도 세대 간의 갈등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명칭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일단 논란의 대상입니다. 특히 기성세대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386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386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

도하는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12월 대선 이래 이들 세대가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중심적인 배후 지지 세력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후 2004년 4월 총선에서는 이들 세대의 대대적인 의회 진출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진보성, 개혁성에 대한 비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3) 386은 누구인가?

한국 사회에서 세대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대는 곧 집단적 경험과 열정, 정조,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4.19세대, 6.3세대, 민청학련세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역사의 단절적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투쟁과 운동에 의한 민주화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중심세력에 대한 성격 규명이 필요합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기성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또 이제는 정치영역에서도 밀려나게 되어 나름대로 소외감이 증폭된 까닭도 있겠지만, 본의든 아니든, 386은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와 있나?

1) 민주정부들에 대한 평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지 20여년이 가까워오는 지금 여러 차례 새로운 민주정부들이 들어섰고, 우리 민주주의의 특성이나 수준에 대해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지난 경험의 토대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다 분명히 전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그것이 한국 사회를 민주적이고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토대 위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까? 386은 군부권위주의를 깨트리는 데 앞장섰던 것과 같이 한국 민주주의를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평가하자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정한 외형적 틀, 제도를 만드는 데는 빠른 시간 내에 일정하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 보통사람들의 정치참여와 절차적 민주주의

그러나 정치참여의 폭과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넓혀졌는가를 생각하면, 불행하게도, 민주화는 되었지만 보통사람들의 정치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부권위주의가 한국 사회의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했던 폭 좁은 엘리트 지배의 권위주의라고 한다면 그에 비해 권위주의 하에서 참여가 배제되었던 지역, 부문들의 엘리트층이 들어와 과거보다 넓어지기는 했어도 크게 넓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이되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민중을 정치에 대폭 참여시키고, 그 채널을 넓히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괄목한 기여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3) 실질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이 점에 관한 한 권위주의에 비해 더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권위주의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고, 실질적 정책면에서 민중의 삶을 일방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측면과 관련하여 오늘날 민주정부들이 하고 있는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정부들의 경제정책은 한결같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주창하는 시장근본주의, 시장만능, 즉 모든 것은 시장을 확대하고 강화하면 해답이 나오는 듯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앞뒤 돌아보지 않고,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추구했던 것과 같이, 앞뒤-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시장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노동 및 사회-복지정책은 말로는 몰라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 여기에서 자세히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성장은 있으되,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나빠지고, 빈부격차는 증가하고, 중산층은 양분화 해체되고,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차이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화,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어김없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살인, 끔직한 가족집단자살, 가정과 괴 등 사회해체는 꼭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정부는 노동운동을 소외시키고, 보통사람들의 희망과 요구를 좌절시키면서 그들의 지지를 상실하면서 아무에게도 기반을 갖지 않는 취약한 기반에 선 정부의 성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4) 민주정부의 수행과 권위정부의 수행

정치는 보통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을 했습니까? 고용 확대, 노동의 중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

제보다는, 성장률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여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지역개발, 기업도시 등 거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의 온 에너지와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이러한 거대사업을 일정한 단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과연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현재 가장 긴급한 일인지, 궁극적으로 언표된 정책의 목표에 합당한 결과를 갖게 될 지에 대해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민주정부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문제의식을 상실했습니다. 재벌중심의 권위주의 성장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가치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의 모색,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산업정책, 생산구조개혁,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에 대한 고민에 너무 인색합니다.

민주화 이전의 직접적인 경험은 권위주의 아래 국가주도형 산업화입니다. 권위주의 관치경제에서 우리는 민주정부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면서 오늘의 민주정부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자체가 결과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결과가 그 하나이고, 민주정부의 무능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양자가 결합하면서 나쁜 것이 증폭되었고, 민주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사람들은 과거 권위주의시절 박정희 신화에 향수를 갖거나 민주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극단(권위주의에 친화적인 재벌중심 성장모델과 민주정부의 무능함과 결합된 신자유주의 발전모델) 사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5) 운동, 민주세력의 도덕성 상실

지금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혁, 진보, 민주화 등은 민주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 담론, 도덕성의 원천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들은 아무런 도덕적, 실천적 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냉소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민주인사 등 ‘민주’ 자 들어가는 말이 이제 아무런 프리미엄을 갖지 못하며, 도덕적 프리미엄 없이 이제는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민주적인 것이 유지되는 것은 덜 민주적인 정치사회세력이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이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뿐이며, 어느 날 이들 보수파들이 이성적, 현실적으로 정비될 때 민주파들은 자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386의 체제내로의 흡수

1) 권력의 중심에 선 386

오늘날 386은 더 이상 운동권도 아니고, 재야인사도 아니고, 시민사회의 비판세력도 아닙니다. 정부 안(청와대, 정부, 17대의원)과 정부 밖(시민사회, 정당)은 공통적으로 헤게모니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부가 되면서 권력은 있고 조건은 갖춰졌으나 비전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여, 있는 것 혹은 그럴 듯한 것을 끌어 쓰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기득이익, 권력들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기존질서와 타협하게 되고 흡수편입하게 된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부 안에서 나 밖에서 언표된 담론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급진주의와, 실제 제도적, 정책적 실천에 있어서 극도의 보수적 내용이 기묘하게 결합하고 있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2) 운동의 이념으로서의 NL-PD

민주화운동시절, 386은 NL-PD(민족해방, 민중민주)라는 운동을 계도했던 이념을 지니는데, 그것은 투쟁을 위한 혁명적 이념, 슬로건 내지는 레토릭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민주화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이루려고 했던 한국 사회와 역사가 안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민족문제와 노동문제라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두 핵심 이슈를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민주주의는 쟁취한 것 - 그 의미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고, 투쟁을 통해 쟁취되었습니다. 투쟁은 기존의 질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냉전반공질서나 국가 주도의 권위주의산업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구질서를 부정하는 담론으로서 민주화는 반란적, 혁명적 계기를 상징합니다.

4) 민주화의 의미

민주화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기존질서를 유지·존속하되, 정치적인 틀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를 통해 정치체제를 바꿀 뿐만 아니라 기존질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시기, 386은 NL-PD라는 혁명적 레토릭이 표현하듯이 후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하나는 한국의 민주화는 혁명적 슬로건이 아니고서는 강력한 기존질서를 변화시킬 수 없고, 따라서 반란적이고 혁명적인 계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NL-PD는 곧 이를 위해 필요한 이념이자 전략, 슬로건으로 일정한 역사적 기능을 가집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혁명이 아니기 때문

에,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내에서 민주적 참여를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행 과정에서 혁명적 계기를 갖되, 그 목표를 민주적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성격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386이 민주주의를 민주화로의 변화 시기에 그들이 이해했던 개혁의 목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상과 목표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 질서의 변화라는 첫 번째 차원의 아이디어는 가졌으나, 두 번째 차원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화된 이후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5) 386은 “변해야 한다” ?

민주화 이후 기득세력들은 386이 지녔던 혁명성을 제어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시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담론은 386은 “변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변해서 과거의 혁명적 이념과 정조를 단절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386은 야성을 벗어던지고 체제에 흡수통합되는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질서의 해체모니가 극히 강하고, 기존질서 자체가 나름대로 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상태로 편입되는 과정은 집단으로서 그들 세대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5. 386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386의 해체과정

386의 해체과정은 그것의 등장만큼이나 드라마틱합니다. NL-PD는 문자 그대로 두 개의 운동의 유과 세력의 합성어입니다. NL은 민족민중이념을, PD는 노동해방의 이념을 대표합니다. 민주화 이후 이들은 변화된 상황에서, 즉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상황에서 과거 투쟁 시기의 관성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념을 현실에서 재해석하여 현실성을 갖는 개혁 이념, 전략,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두 유과는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 안 되는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데올로기, 정조, 전략적 사고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논쟁의 초점은 언제나 이데올로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진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사람과 세력을 평가함에 있어 NL의 기준은 얼마나 민족자주인가, PD는 얼마나 노동자해방인가 하는 것으로, 반민족, 반민중 논쟁 수준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서 이데올로기적 급진성을 갖는 거대담론은 무성하지만 내용이 없어서 논쟁해봤자 얻는 것은 없고, 남는 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뿐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판의 수준이 이데올로기적이고 추상수준이 높은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논쟁은 있지만 그것은 현실에 기초를 두지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지 못하거나, 혹은 토론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보다 구체적인 문제가 의제가 될 때 합리적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생산적이고 누적적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추상수준에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처와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얻는 것도 없이 집단성을 해체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 토론과 논쟁이 가치를 갖는 것은 그것이 분리와 해체를 결과하는 것이 아닌, 작은 차이를 보다 넓은 지평에서 공존하게 함으로써 집합적 정체성을 깊고 넓게 하는 것, 힘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힘을 모으는 과정을 수반하게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2) 해야 할 과제

i) 현실에 기초한 이념의 정초

운동 시기의 NL-PD는 민주화 이후의 현실에 기초하여 실천가능한 이념으로 재구성되고 보다 치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386은 체제에 저항하는 세대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제로 건설해야 할 중심세력으로 스스로의 역할 전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극적 시민에서 적극적 시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ii) 진테제를 만드는 노력

NL-PD는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현실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형성된 이론입니다.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갖는 제한과 제약 속에서 현실에 기초를 둔 대안을 통해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델을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iii) 이념, 원칙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대안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강했다는 얘기는 추상은 있으나,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서적 급진주의와 보수적 실천이 기묘하게 결합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실천하는 단계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갖다 쓰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의 실패를 강한 레토릭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현상은 양자의 불일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사회적으로 분화되고,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의 현실은 과거에 비해 극히 복잡하여 간단한 원리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iv)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문제를 둘러싼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필요하며, 이러한 토론들을 통하여 이념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v)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변화는 정부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시민사회를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권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당장은 쉬울 것처럼 보이나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만으로 부족한 점은 사회 전체의 변화로써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386세대는 운동 과정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되고, NL-PD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두 개의 중심적인 문제의식과 이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파로서의 정신, 가치, 이념을 갖되, 현실로부터 배우고,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그리고 대외환경이 제기하는 문제를 대면하면서 그 동안 거의 제외되었다시피 한 이념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곧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민주화세력에 거는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강조해야 할 것은 투입 지향의(input-orientated) 정치, 정책형성의 모델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유리된 전문가들만의 싱크탱크(think tank)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요구와 변화가 투입되고 소통되는 체계를 갖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산출(output) 중심의 정책생산 전문가 집단은 자본과 권력, 헤게모니 등 외부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탱크가 잘 발달해 있는 미국정치, 미국 민주주의가 갖는 문제 중의 하나는 정치가 사회적 기반, 민중적 요소와 괴리되어 중산층적인 세계관에 의해 지배되는 전문가 엘리트 집단만의 세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싱크탱크를 만든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나아가 좋은 싱크탱크가 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4월 21일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창립기념식